

더민주-정의당-국민의당, 테러방지법을 막아라

필리버스터 기록 경신 언제까지?

(무제한 토론)

김광진 의원 5시간 33분
은수미 의원 10시간 18분
의원당 5시간 이상씩 진행
이론적으론 보름이상 지속
스스로 멈추기전까지 계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첫 발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왼쪽), 세번째 발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자료를 들여보이고 있는 모습.(가운데), 네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전날 열린 더민주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임시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11일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내 다수파인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5'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의원이 본회의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본회의의 시작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전날 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제정 지연을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요건(이른바 직권상정)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자 이에 반발,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하고 발언을 시작했다. 첫 발언자인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5시간33분 간 발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5시간9분)을 52년만에 갈아치웠다. 비통을 이어받은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1시간49분 간 발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무기명 투표를 해야한다.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당이 스스로 멈추기 전까지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 새누리당의 현재 의석수는 157석으로 중단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시작했다. 본회의에는 테러방지법 외에도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77건의 법안이 부의 돼 있다. 필리버스터가 멈추기 전에는 이같은 법들이 통과되는 어렵다. 특히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기로 합의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전날 밤 1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전날 오후 7시6분에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계속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비롯해 이석연·정갑윤 국회의장이 번갈아가면서 의장석을 지키고 있다. /이성주 기자

‘필리버스터’ 야기한 테러방지법 쟁점은?

野, 국정원 정보수집권한에 ‘인권침해’ 우려해 강력 반대

대테러센터 설치 여부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24일 야당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강력 성토하고 나서면서 정국은 팽팽한 대치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최대 쟁점은 국가정보원에 테러위협인물의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동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국내도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정보 수집 권한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이 정보수집권을 빌미로 일반인 사찰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테러센터에 정보수집권을 쥐어야

다고 맞서고 있다. 국정원은 과거 전력 등을 감안해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벌일 수 있어 국민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콘트롤 타워 격인 대테러센터를 어디에 둘 지도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국무총리실 또는 국민안전처에 뒀아 한다고 맞서면서 협상은 수개월 간 공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회를 전격 방문해 테러방지법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자 새누리당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두되 정보 수집권한은 국정원이 갖게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 또한 콘트롤타워를 총리실에 둘 뿐 실질적인 정보업무를 국정원이 하게 돼 기존 여당과 차이가 없다며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성주 기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당 원내최고수석부대표로 임명

유성엽 의원(정음·사진)이 국민의당 원내최고수석부대표로 임명됐다. 국민의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내의 정책적 역량 강화와 효과적인 대



국민 전달을 위해 유성엽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에,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을 원내대변인에 임명했다. 유성엽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국민의당이 원내에서 강한 제3당, 양당정치 의 대안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정의당 강상구 예비후보, 김계부안에 출사표

정의당 강상구 대변인이 제20대 총선에서 김계부안(예정·사진) 선거구에 출마선언했다. 강상구 예비후보는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의 정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신안당체제로 보수화했다"면서 "이런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서민 정치를 복원해 김계와 부인이 잘사는 농어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 예비후보는 김계출신으로 전주 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2000 세계경제포럼 대우 국제 NGO 회의 한국대표 등을 역임했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최형재 예비후보, 노인안심정책 공약 발표

더민주당 최형재 예비후보(전주 완산을·사진)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주형 노인 안심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노인 안심정책 공약으로 기초 노령 연금과 함께 일자리로 소득 확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확대, 4대 중증 질환 의료비 3대 비급여 정책을 급여전환, 노인 단기 가사 서비스 확대, 고령자의 맞춤형 주거 제공 정책을 내세웠다. 최 후보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59.6%로 세계 1위이고, 노인 60%가 무연금이다"면서, "이제 더 이상 가정이나 자식에게만 어른 공약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정동영 "당 일각 갈등설 관련 단합 중요"

국민의당 정동영 예비후보(전주덕진·사진)는 "(박근혜 정부의) 개선 공단 폐쇄 사태 이후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 야권이 치열한 경쟁과 재탄생을 통해 대안세력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으로 국민의당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4일 아침 한라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날개로 민생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국민의당에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불거진 당 일각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단합이 중요하며 잘 정리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신광영 기자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 방안 보고

고용률 70% 조기 달성을 위해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바꾸고,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우선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정운영 방향을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을 일자리 프레임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거시경제를 성장률 뿐만 아니라 고용률 중심으로 운용하고,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전면 실시할 것과 청년·여성·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월 1회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추진회의 개최 소관 부처별 책임제 도입, 청년·여성 고용대책 추진체계 별도 운영 등을 그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동개혁의 조속한 완수와 교육개혁을 통한 노동개혁 뒷받침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노동 5법 등 노동개혁의 조속한 완수 ▲노동개혁 추진 방식의 전환 ▲추기적인 개혁 아젠다 발굴 ▲교육개혁과의 동시 추진 등 네 가지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자문회의는 청년·비정규직 등 과소대표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노사정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중심의 공익안 마련이나 공문화협의 강화 등을 통해 현행 합의 중심의 노사정 의사결정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주 기자

더민주 표창원 선대위원, 덕진구 방문

더민주 영일 1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겸 선대위원은 24일 김성주 예비후보의 지역구인 전주서 덕진구를 방문해 힘을 보탤다. 이날 표 위원은 김성주 예비후보와 함께 지역구 민생 탐방 및 전북대 학생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송천동 먹자골목에 찾아 지역민 소통행보를 펼쳤고 삼각지 거리인사도 참여했다. /신광영 기자

오정례 전 전주시의원, 도의원 출마 선언

국민의당 오정례(48·사진) 전 전주시의원은 전북도의원보궐선거 제2선거구 출사표를 던졌다. 오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전북도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오 예비후보는 5대 6대 전주시의원으로서 활동했다. 오정례 후보는 "정치란 나눔과 분배의 문제로 대한민국은 현재 자산 소득 일자리 지역이라는 4대 격차 심화로 서민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불평등과 불공정한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제2의 동학에 나서는 첫 번째 봉준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광영 기자



저 총선 출마합니다

성은순 예비후보 "저출산 문제 구체적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성은순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덕진·사진)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성은순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방법으로 '성령' 등 보너스와 '야바'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성 후보는 "성령등 보너스란 남성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 가운데 임금이 더 많은 사람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이 적은 사람(주로 여성)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와 같은 정책은 남성으로 하여금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가정으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양현섭 예비후보, 인후동 성심 인력시장 방문

새누리당 양현섭 국회의원 예비후보는(전주덕진·사진) 24일 인후동 성심 인력시장을 방문해서 150여명의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양 후보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자 열심히 살아가려는 여러분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며, 새삼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깨달았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한 만큼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요소요소로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이 많다. 이는 정치권의 몫이며, 반드시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위로했다. /신광영 기자

